

한국사의 저류는 자주정신과 민족주의

미국 「리더즈」 지와의 회견

1981년 4월

질문 : 반공법의 철폐는 북의 위협에 대처할 자신감의 발로인가?

답변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몇 년 사이 그 군사력을 급속히 강화했다.

그들은 또한 대한 비방방송과 반한유인물 살포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선동과 내부파괴를 통해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추악한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반공법의 철폐는 비적성 공산각국과의 상호접촉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북한에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북한대표들을 회의장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현실에 맞는 실천 가능한 통일방안도 계속 연구 발전시킬 것이며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더욱 강화, 조직화할 것이다.

질문 : 각하는 「레이건」 행정부를 상대로 인권과 안보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나갈 계획인가?

답변 : 한국과 미국은 1세기 전에 우호조약을 체결했었다. 1백년간에 걸친 우호 협조의 증진은 두 나라를 특수한 관계에 놓이게 했다. 두 나라는 이제 확고한 동반자가 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 우호에 입각, 나는 국가안보에 역점을 두면서 「레이건」 대통령정부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미수입초과라는 무역불균형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나 한·미간에 알력이 일어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맹방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다할 작정이다. 우리는 「레이건」 행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질문 : 한국역사는 사대주의와 대외의존의 역사이며 진취적이기보다는 현실과 쉽사리 타협해 온 역사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국민은 평화를 애호하고 낙천적이며 자주에의 강한 의지를 보여온 국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국민의 특성을 어떻게 보는가?

답변 : 한국 역사를 「사대주의의 역사」라고 보는 경향은 일본의 한국식민통치를 정당화시키려던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관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한국역사관의 잔재는 지금도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대주의는 고사하고 한국 역사의 저류를 변함없이 이루어 온 것은 자주정신과 민족주의였다고 나는 믿고 있다. 때때로 사대주의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전체 국민은 이러한 특질을 나타내 보인 일이 없다. 가끔 추종적이라고 보여지는 일부 정책이 취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국가독립을 지키기 위한 강대국들에 대한 창조적 대응책이었다고 이를 해석하고 싶다. 만약 일부 사가들의 주장처럼 한국 역사가 사대주의의 역사였다면 한국은 존립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한국 역사는 이미 오래 전에 끝장나 있었을 것이다. 나는 한국인의 국민성과 그들의 역사간에는 불가피한 인과관계가 있다

는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국민의 장래는 그들의 역사나 국민성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뜻이다.

질문 :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계획인가?

답변 : 우리는 지난날 경제성장에 집착한 나머지 정신면의 배양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점은 새 시대에 해결해야 할 주요문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에 특수부서를 마련하여 문화·교육문제에 관해 나에게 건의토록 하고 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자주정신과 자연과의 일체감을 가지고 씩씩해야 할 주요과제의 하나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은 우리들의 문화생활의 뿌리를 이룬다. 민족문화를 제고시킬 최선의 방법은 우리 자신의 문화유산의 바탕 위에서 외국문화를 창조적으로 융화시키는 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발전에 더욱 많은 정력과 자금을 투자해야 할 시기이다. 그렇다고 우리 문화유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배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질문 : 각하의 정치적·사회적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

답변 : 우리는 과거의 내부불화와 부패요인들을 일소하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깨끗하고 능률있는 행정부를 운영,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창조할 결의로 있다. 일부 개혁은 이미 성과를 이루었고, 그 성질상 즉효가 있을 수 없는 일부개혁은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이들 개혁이 주는 여파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 시대의 기반은 이미 다져진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질문 : 원유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답변 : 원유를 국제시장으로부터 구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로서는 산유국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에 우리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경제협력을 통해 산유국들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증대할 길을 늘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건설분야·기술협력·물자교역분야 이외에도 교육·문화, 기타 각 분야에서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국내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제품의 질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대외무역이 확장되고 이는 우리가 국제시장으로부터의 원유공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질문 : 대통령직을 어떻게 보는가?

답변 : 대통령직은 영광된 지위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내 마음은 이 영광을 향유한다기보다는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차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즐기는 지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할 지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어떤 개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때 그들은 오직 그 개인으로 하여금 옷을 잘 입고 안락의자에 앉아 진수성찬을 들라고 최고 지위에 앉힌 것은 아니다. 대통령직을 단지 개인적 야망의 목표로 간주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바로 이러한 사고가 가능한 한 오래 정권을 잡고 있겠다든가, 개인승배·불법·타락선거와 극단적인 파벌 대결과 같은 과거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나는 또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한 시민이 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들이 쉬고 있을 때에도 기꺼이 일하겠다는 신념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질문 : 서구문명에 의해 탄생한 민주주의가 한국과 같은 「아시아」의 유교문화에 적합한지, 그리고 한국에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겠다는 것은 정확히 말해 어떤 의미인가?

답변 : 서구문화는 기독교를 기초로 세워졌으며 진취적인 태도와 적대관계를 특성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자본주의는 청교도 정신 아래 서구에서 발전되었으며 이는 또한 민주주의의 지주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농경문화를 기초로 한 동양의 유교문화는 절제를 특성으로 하여 대결이나 적대관계보다는 조화와 중용을 강조하고 있다.

동양의 인간관계도 법률에 입각한 권리의 주장보다는 전통적인 윤리개념으로 형성되어 왔다.

한 나라의 정치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추구해야 할 공동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이상은 각국가가 선별적으로 보다 나은 생각과 제도를 동화시켜 이를 자국의 전통적인 정치문화와 융합시켰을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내 견해로는 무분별한 모방은 가끔 진진보다는 좌절, 단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40여년 동안의 개발도상국들의 경험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질문 : 헌법상의 시행착오에 대하여

답변 : 한국의 헌정사는 하나의 「시행착오의 역사」였다. 한때 우리도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헌법형태를 모방한 헌법을 제정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생명없는 공허한 인쇄물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났었다. 우리는 과거 달성할 수 없는 이상을 추구한 셈이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30년이 넘는 헌정사를 통해 단 한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경험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이상을 현재 한국의 정치토양에 정착시키려면 다음 3가지의 선결요건이 있다.

평화적 정권교체, 정치풍토의 개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높은 공복정신이 그것이다. 따라서 나는 한국의 토양에 민주주의정치를 배양함에 있어 최우선적인 과제는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민주정치란 곧 공정한 경쟁, 정의 그리고 준법정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성이 지배하는 건전한 정치풍토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관리들이 일반시민에 대해 오만하게 행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봉건적 태도, 아직도 한국사회 일각에 상당히 퍼져 있는 관습의 잔재를 척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공직자들의 가슴에는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가득 차야 할 것이다.

질문 : 올해 한국경제의 전망은?

답변 : 한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원유가격 인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인플레이션으로 훨씬 무거워졌다.

석유가의 대폭적 인상만 없다면 한국경제는 수요·공급·통화면 등에서 금년 가을

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82년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82년에 가서는 인플레이도 국제 수준으로 낮아지고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7~8%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